

2001학년도 자연계 대학의 실질적인 평균 경쟁률이 0.7대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처음 보도된 것은 2001년 5월 20일 동아일보를 통해서였다. 그 보도를 시작으로 아무도 모르게 청소년들 사이에 불처럼 번진 소위 '이공계 기피'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논란거리가 되었다. 그 원인과 심각성에 대한 수많은 진단과 함께 다양한 개선책이 제시되었다. 최근에는 이공계의 공직 진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까지 발표되었지만 이공계 기피는 여전히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글_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 duckhwan@sogang.ac.kr

학 공 계 기 피

진 각 의 과 피

과 학 자

후 보

조상과 남의 탓에 생긴 이공계 기피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전통을 물려준 '조상 탓'에서부터 이공계에 대한 사회의 부당한 대우를 지적하는 '남의 탓'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자연계 응시자의 감소와 함께 시작된 '예체능계' 응시자의 급격한 증가 현상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공계 기피가 처음 지적된 해에 수능의 등급제가 시행되었고, 알량한 자존심 이외에는 아무 이유도 없이 응시 자격을 1등급(상위 4%)으로 제한함으로써 광범위한 정원 미달 사태를 초래했던 서울대의 입시 정책에 대한 비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런 응시 자격을 갖춘 학생의 수가 8천 명에도 이르지 못했으니 서울대가 정원 미달을 자초했던 셈이고, 바로 그것이 이공계 기피를 본격적으로 불붙인 계기가 되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더욱 아쉬운 것은 이공계 내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잇을 만하면 다시 불거지는 연구소 통폐합 논란, 연구는 쳐제두고 생계 유지를 위해 프로젝트를 찾아 헤매도록 만드는 PBS, 비전문가들에 의해 좌우되면서 표류하는 연구개발 정책, 자신의 흥미와 경험을 포기하도록 해일처럼 덮쳐오는 정체 불명의 '8T', 낯뜨거운 시비로 얼룩진 과제선정 과정, 논문 제조업자가 되기를 강요하는 불합리한 평가제도, 연구비 확보를 위해 감수해야 하는 끊임없는 이합집산과 줄서기, 모두를 '연구비 도둑'으로 몰아가는 엉터리 연구비관리 제도, 스스로 미래 경쟁력의 수단이라고 뽑내다가 자초한 사회의 반과학적·반기술적 정서... 우리 사회에서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자연의 신비를 규명하고 미래 사회의 생존을 책임지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만 하는 고통은 끝이 없다. 과연 우리의 과학기술계의 이런 현실이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와 정말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일까?

감추기보다는 철저한 자기 개혁

선진 사회가 모두 겪고 있는 이공계 기피를 필요 이상으로 과장해서 오히려 이공계 기피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공계 기피를 애써 드러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기술자가 되면 '신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청소년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단다. 앞에서 나열했던 수많은 '우리 탓'에 이 땅을 떠나버리는 과학기술자들까지 있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공개된 '열린 사회'다. 우리가 감추고 싶다고 감추어지는 세상이 절대 아니다. 그런 사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감추는 말인가? 정보화 시대의 약아빠진 청소년들을 자신도 추스르지 못하는 과학기술자들의 엉성한 감언이설로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기막힌 과대망상이다.

오히려 과학기술계의 철저한 개혁을 통해서 그야말로 진정한 '과학기술 중심 사회'를 구축해야만 한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죄책감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철저하고 적극적인 자기 개혁뿐이다. 과학기술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도 뼈를 깎는 자기 반성의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조상과 남을 탓하면서, 청소년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투명한 공직사회 구축이 과제

이공계 기피에 대한 대책도 흥미로웠다. 몇몇 기관장들의 '처우 개선'과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신설을 내일처럼 반겼던 과학기술자는 아무도 없었다. 온갖 불협화음 속에서 억지로 만들어낸 초라한 '과학기술자 명예의 전당'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다. 눈앞에서 국가가 주는 장학금 봉투를 흔들며 훌훌 외국으로 떠나버리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이공계 교수들은 그야말로 닭 쫓던 개 형상이다.

그런데 중국처럼 공직사회에 이공계 출신의 진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모양이다. 결과가 어찌 될지는 몰라도 우선은 상당수의 이공계 출신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우선 현재의 공직을 꽉 틀어쥐고 있는 '비이공계' 출신이 자리를 선선히 내어줄 것 같지도 않다. 그리고, 이공계 출신이 지금의 공직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가도 검증되지 않았다. 중국의 지도자들이 이공계 출신이라고 해서 우리도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은 너무나도 순진한 발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행정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공직사회의 특성이다. 불행하게도 그 행정경험이 자신의 업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었다는 뜻이 아니라, '순환 보직' 관행에 따라서 여러 부서를 돌아다녔고, 그 과정에서 폭 넓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는 뜻에 불과하다. 국제 협상에 나선 우리 공직자들이 번번이 참패하는 현실에서 '풍부한 행정경험'의 허구성은 여지없이 드러난다. 풍부한 행정경험은 우리 공직사회에서만 그 가치를 발휘할 뿐이고, 평생을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선진국의 관리들에게는 전혀 쓸모가 없는 덕목일 뿐이다.

실제로 그런 관행이 이공계 출신을 공직사회에서 몰아내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이공계 출신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60년대 초반에 상공부 국장의 거의 대부분이 이공계 출신이었다는 사실이 바로 그 증거다. 우리 공직사회가 '풍부한 행정경험'보다 '철저한 전문 지식'을 존중하는 밝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을 하지 않는 한, 이공계의 공직 진출은 일회성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공계 출신의 공직 진출이 힘든 것은 회계 장부가 복잡하기 때문이 아니다. 고등수학과 통계를 전공으로 하는 이공계 출신이 '차변'과 '대변'뿐인 대차대조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공계의 공직 진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전문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법과 제도보다는 인맥을 바탕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어둡고 불투명한 패거리 문화다. 그리고 그런 장애 요인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구시대적 유물에 불과한 '순환 보직' 관행이다. 부정을 막는다는 이유로 60년대의 군사 문화의 일부로 도입되었던 그런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공계의 공직 진출 확대는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이다. ㉔